

환경문제발생과 정부의 대응과정

—대기·수질문제를 중심으로—

연 말이 되면 많은 환경단체와 언론인들이 올해의 10대 환경 사건이나 올해의 환경인 또는 공해인 등으로 한해 동안의 환경관련 주요사건들을 정리하여 발표하곤 한다. 올해는 또 어떤 사건들이 환경사건 10대뉴스로 선정되고, 올해의 환경인은 어떤 사람 또는 단체가 될지 궁금하다. 무엇이든 쉽게 흥분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일수록 지나간 일들을 정리해 보고 한데 묶어 평가해보는 기회가 필요한데, 환경문제는 특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대책들이 그후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리는 우리들의健忘症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듯이 환경문제도 대형사건이 터지면 그때만 잠시 떠들썩하다가 곧 잊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점에서 올해의 환경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환경단체들은 그 사건이 여론에 미친 영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申昌賢
(환경정책연구소장)

하는 작업도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올해의 환경관련 주요사건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문제

지하철역의 라돈오염도

대기분야에서는 우선 지난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지하철역의 라돈오염이 문제가 되었다. 서울시립대 김신도 교수가 발표한 「서울시 지하철의 대기환경관리」 연구논문과 한양대 산업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서울시 지하철내 환경기준 설정 및 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등 두개의 연구결과 모두 지하철 3호선역의 라돈오염도가 환경처 권고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고 신도림, 종로 3가역 등 8개역에서는 폐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노동부 권고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물론 환경처도 지하철역과 지하공간의 환경기준치를 설정하는데 주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에도 아직 지하공간의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0년 5월에 서울시가 측정 한 지하상가의 먼지오염도를 보면 잠실, 영등포, 청계천, 강남지하상가 등이 환경권고치의 두배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때문에 서울시가 30개 지하상가의 상인 380명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해본 결과 10명중 2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에는 폐결핵환자도 16명이나 발견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역과 지하상가의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오염물질 허용기준치를 설정하여 이곳에서 생활하는 근로자와 상인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중국 황사현상의 피해

대기분야에서 올해 또 문제가 된 것은 중국의 황사현상으로 인한 피해다. 지난 5월 환경처는 황사 중 먼지성분 분석결과를 통해

황사로 인한 먼지오염도가 2~3배 증가했으며 황사속에 포함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의 농도는 이전보다 2배정도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기상청도 올 3월 이후 황사현상이 모두 5차례 14일간 나타나 지난 '79년 황사관측업무가 시작된 이래 최대 발생치를 보였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황사는 3~5월중 중국 황하북부와 고비사막 등의 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6월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의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의 21배로서 이중 30% 이상이 중국 동북부지방 공업지대에서 배출되어 기류를 타고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중서부지역에 강한 산성비를 내리게 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한승주 외무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동성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해양오염의 규제 및 국가간 유해폐기물의 이동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한중 환경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수질오염문제

수돗물 세균검출과 맑은물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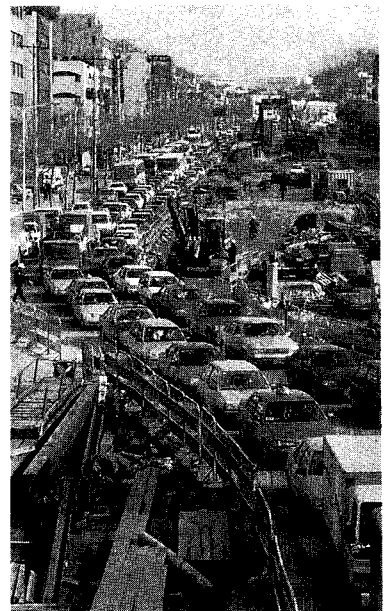
수질분야에서는 제일 먼저 서울시 수돗물의 세균검출문제를 꼽을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대 미생물학과 연구진(지도교수·김상중)은 서울시내 수돗물에 기준치를

웃도는 일반세균과 먹으면 곤란한 대장균이 들어있으며 이 대장균에는 이질을 일으킬 수 있는 시켈라균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91년 9월부터 1년동안 잠실수중보와 구의정수장, 능동과 전농동, 미아동의 가정 수도꼭지 등 5개지점을 각각 23차례씩 조사한 결과 일반세균수가 21차례나 음용수 수질기준치를 초과했고, 수돗물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대장균도 5차례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87년 7월부터 '93년 6월까지 서울시내 수돗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고 밝히면서 김교수팀이 사용한 분석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수돗물의 세균검출문제는 김교수가 사용한 빈영양배지방식과 서울시가 사용하는 부영양배지방식간의 학술논쟁으로 변질되어버리고 정작 중요한 수돗물의 안전성문제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달 정부는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모두 15조원이 소요되는 '맑은 물 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는데, 지난번 수돗물과동매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민심수습용 발표라는 지적이 많았다. 왜냐하면 7월에 발표한 '맑은 물 종합대책'은 그동안 제7차 5개년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 그리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질보전계획 등으로 이미

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건망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듯이 환경문제도 대형사건이 터지면 그때만 잠시 떠들썩하다가 곧 잊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다.





정작 본질적인 해양오염방지업무의 일원화 문제는 부처이기주의에 밀려 해결하지 못하고, 전문인력과 장비의 확충을 위한 예산증액안은 경제기획원에서 심사할 때마다 삭감해 버린 것이 이번에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두번 세번 발표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양만 기름유출사고

9월에는 전남 여천시 묘동 앞바다에서 선박충돌사고로 유출된 병커C유가 한려수도를 따라 광양만 일대를 오염시키면서 인근 양식장들을 폐허로 만들어 6~7백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을 뿐만 아니라, 기름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유처리제의 독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까지 파괴되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그러나 해양오염 방제업무가 내무부산하 해양경찰대와 교통부산하 해운항만청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만 기름유출사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방제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90년 7월에 영종도 앞바다에서 유조선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7,500드럼에 이르는 병커C유가 인천항 일대를 오염시켰을 때도 이미 이와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이때문에 정부는 '91년 3월 임시국회에서 해양오염방지법까지 개정할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본질적인 해양오염방지업무의 일원화 문제는 부처이기주의에 밀려 해결하지 못하고, 전문인력과 장비의 확충을 위한 예산증액안은 경제기획원에서 심사할 때마다 삭감해 버린 것이 이번에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

를 초래한 것이다. 광양만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급히 해양오염 방지업무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여, 권한도 없는 환경처를 상대로 해양오염방제의 책임을 추궁하는 우스꽝스러운 국정감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지하수오염과 부처이기주의

수질오염은 지표수인 하천과 호소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지하수도 심각하다는 사실이 올해부터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환경처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전국 770여군데의 지하수에 대한 오염여부를 조사했는데, 1차와 2차 조사결과 모두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130여개소가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80여개 지점이 질산성 질소의 음용수 수질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질산성 질소는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과 빈혈증세를 일으키는 오염물질로서 주로 분뇨나 축산폐수가 그 원인이다.

금속세정제로 사용되는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공단 주변지역인 경남 양산읍 목정리가 기준치 0.03ppm의 3백배가 넘는 9.241ppm을 기록하는 등 모두 24개 지점이 초과했고, 남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등이 기준치 0.1ppm의 3배가 넘는 0.32ppm으로 나타나는 등 6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한

고갈·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부, 상공자원부(당시 동력자원부), 환경처 등 3개 부처가 서로 자기부처 소관업무임을 주장하며 각각 별도의 법률시안을 준비하는 부처이기주의를 드러냈다. 건설부는 수자원관리의 소관 부처로서, 동력자원부는 지하수가 지하자원이 일부라는 이유로, 환경처는 지하수도 지표수의 일부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모두 설득력있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결국 지하수법안의 소관부처는 힘있는 건설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건설부가 발의한 지하수법안을 보면 여전히 건설부, 상공자원부, 환경처, 시·도지사 등으로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지하수도 역시 지표수와 같이 수량과 수질, 상수도와 하수도 등으로 권한과 책임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들이 똑같이 발생할 여지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지하수 부존량 기초 조사는 상공자원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사자료의 종합관리는 건설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설정과 수질오염측정은 환경처,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은 보사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등이다. 그밖에 개발·이용, 관리를 위한 조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과 행위허가,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수리 등은 시·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왜 지하수 관리업무를 건설부, 상공자원부, 환경처 등으로 분산시켜야 하

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발견된다.

남해안일대 PCB검출발표

'92년 6월부터 '93년 2월까지 경남대 환경연구소가 수행한 「남해안 및 섬진강 유역에 잔류하는 PCB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맹독성물질인 PCB가 섬진강 하류와 남해안 일대 해수 11개 지점에서 검출되었고 저질과 토양은 20개 지점에서 검출되었는데, 하동군 농경지의 경우에는 40~50ppb의 고농도 PCB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0월 환경처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PCB는 비록 미량이라 할지라도 어패류와 농산물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어 새까만 피부의 아기를 낳는 등 각종 공해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7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으로 제조와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그런데 경남대 환경연구소의 민병윤 교수팀은 또다시 마산 앞바다의 퇴적물에서 사람의 하루 섭취허용량의 1백50만배 이상인 1.5ppb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여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나 환경처는 이와같은 사실을 지난 3월 경남도로부터 통보받은 후에도 아무런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환경행정의 무신경을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 국회 보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PCB의 전국오염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94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한강 '납'검출 파문

11월에는 또 한강에서 검출된 납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여 문제가 되었다.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가 지난 7,8월 두차례에 걸쳐 소양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과 잠실대교, 천호대교, 강동대교 등 10개 지역에서 한강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잠실종합취수장 부근 잠실대교의 경우 납이 환경기준치 0.1ppm의 3~5배로 나타났고, 구의수원지 부근 강동대교에서는 한강 본류중 가장 높은 0.437~0.67ppm으로 환경기준치의 4~6배를 초과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환경처가 조사한 결과는 구의지역에서 최고 0.055ppm이 검출되는 등 모두 기준치 이하로서 이와같은 측정결과의 차이는 환경처와 서울시 두 기관 중 하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경처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사용한 측정기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분석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서울시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반면에,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환경처와 공동으로 다시한번 조사하기로 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7~8월에 서울시가 측정한 한강물의 시료가 없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공동으로 재조사를 벌일 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결국 지난 '90년의 THM 검출소동 때와 마찬가지로 당초 기준치 이상 검출된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